

“공기업 부실·도덕적 해이 심각, 대책 없나”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공기업 부실 경영 = 조호권(민주·북구 4) 의원은 이날 시정 질문에서 광주시 산하 공기업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와 허술한 운영 등을 꼬집었다.

조 의원은 광주시의 종합감사 결과를 통해 감대중견컨선펙터의 허술한 보증금 정산, 영역계획서 미제출, 무자격 업체를 통한 공사 시행 등 미숙한 운영에 대해 지적했다. 조 의원은 광주디자인센터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남발, 소홀한 예비비 사용 승인 절차, 구매 계약, 유희자금 관리 등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특히 “디자인센터의 경우 지난 2005년 개관한 뒤 지금까지 인사만 15차례 실시하는가 하면 디자인 연구 및 업체 육성, 지원사업 등을 담당하면서도 3차례의 전문직 공채를 통해 채용한 직원 중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회는 14일 제1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이틀째 광주시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벌였다. 시의원들은 이날 시정 질문에서 광주시 산하 공기업의 총체적 부실 경영과 도덕적 해이,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출대,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 등에 대한 무관심 등을 지적했다.

중기청 선정 우수 점포, 광주 3곳 불과한 이유는 “신용보증 확대, 생계형 소상공인에 도움 주겠다”

조 의원은 또 광주시 산하 4개 공사·공단 부채가 지난 2005년 2천800억원에서 지난해 4천620억원으로 급증한 이유를 따졌다.

광주시는 이와관련,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의 부채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완료되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큰 문제는 아니다”면서 “우선 광주시가 재

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래시장 활성화 무관심, 소상공인 지원 확대 = 조 의원은 이어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이후 전국에서 선정한 재래시장 우수 점포 233곳 가운데 광주 지역은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재래시장 활성

화 무관심을 따졌다. 다른 5개 광역시의 경우 인천 27곳, 대전 16곳, 부산 16곳, 울산 10곳 등이 선정된 것에 비하면 광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용 보증 건수는 지난해(1천413건 300억원)에 비해 올해 3배 이상 폭증(8월 현재 4천356건 577억원)했는데 광주시 지역의 출연금은 지난해 2004년 5억에서 2007년 3억으로 감소한데 이어 올해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우수 점포 선정 실적 저조한 이유는 특별한 혜택이 없는 반면 신청 절차가 복잡해 상인들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보증재원의 안정적 확대를 위해 국비 출연 재계와 금융기관 출연을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신용보증 확대 등 생계형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정치권 ‘국감제도 개선’ 꿈틀

한·민주 “국감 종료 후 보완책 마련을”

국회자문위 “정기국회·국감 분리해야”

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들던 가운데 부실 국감에 따른 내외부적인 비판이 고조되면서 ‘국감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행 법과 제도로는 효율적인 국감, 신뢰받는 국감이 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여야를 넘어 정치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감 보완책 마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감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매주 한차례씩 회의를 갖고 있으며 국감이 마감되면 각 정당도 국감 제도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 제2분과는 현재 국감 제도개선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달 말께 전체회의를 거쳐 국감 제도개선안에 대해 김형오 국회의장에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자문위는 일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국회 회기중에 국감을 실시토록 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 정기국회와 국감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월 정기국회 개최 이전 국감을 위한 별도의 회기를 마련하는 게 국감 본연의 기능도 살리고, 법안 및 예산안의 심층 심사라는 정기국회의 목적이 달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20일의 국감 기간에 500개에 이르는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국감의 피감기관 숫자만 해도 478개에 달한다.

이와 관련, 자문위 내부에서는 피감기관의 숫자를 대폭 줄여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격년제 국감을 실시하는 방안, 20일로 정해진 국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감 종료 직후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에서 국감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감 이후 제도개선과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며 민주당은 당내에 국감 제도 개선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시정 질문 자료 출처·근거 밝혀라”

해당 업체들, 반박·성명서 잇따라

광주시의회는 시정질문에 대해 해당 업체들의 해명 요구가 잇달았다.

광주지역 광산대표자협의회 등 4개 단체는 14일 김후진(민주·북구2)의원이 시정 질문(13일)에서 중국산 광부품 문제를 지적한 것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가격이 싼 중국산 LED와 콘덴서 등 광산업 부품을 수입한 뒤 광주 공장에서 1차 가공을 거쳐 국산 제품으로 대기업에 납품한 2개 광산업 업체의 실체를 밝혀라”고 요구했다.

광주광협회와 광주김치축제추진위원회 등도 이날 김후진 의원이 지적한 김치축제와 관련, 성명을 내고 “시정 질문에서 김치 축제의 문제점으로 ‘조잡한 전시, 천편일률적인 축제 내용, 불결한 위생, 불편한 배세’ 등을 지적한 자료의 출처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조호권 의원이 14일 시정질문한 소상공인 지원 문제,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 지방공기업의 부실 운영 등에 대해서도 (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의 해명자료가 잇따랐다.

김지율기자 dok2000@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여론 수렴도 없이 부적절하게 금산분리를 원화하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감사원 “쌀 직불금 감사 결과 오늘 공개”

감사원은 14일 고위공직자 쌀직불금 부당 수령 논란과 관련, 지난해 실시한 ‘쌀소득보전 등 직접지불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15일 중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쌀직불금 감사결과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감안,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감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의 주요 목적은 쌀직불금 제도의 미비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고, 농민부에 개선방안도 통보했다”며 “이달 7일 농지 실경조사 확인강화, 직불금 부당수령자 제재 규정 신설 등을 담은 쌀소득보전법 개정안이 제출된 만큼 정부의 개선

조치가 종료됐다고 봐서 감사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어 당시 감사에서 적발된 쌀직불금 수령 공작자들의 세부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지적에 대해서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람들을 직업군으로 대분류해 추정통계치만 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혜걸 의원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이 지난 1일 공개한 감사원 대외비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2006년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아간 99만8천명 가운데 약 17만명을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비경작자’로 추정했다.

연합뉴스

여야 ‘금산분리 완화’ 싸고 공방

한나라 “경쟁력 강화” vs 민주 “재벌 사금고화”

국정감사 와중에 나온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방침으로 국감장 밖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특히 오는 16~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정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금산분리 완화 논란은 국감장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완화 방침 발표에 대해 한나라당은 14일 민간 자본 유입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이라며 환영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 등 금융의 공공성을 역행시킨 조치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정권 아래서는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되고 있지 않느냐”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 시점에 부적절하게 금산분리를 들고 나오지 말고 금융위기 대책과 중소기업 보호정책을 갖고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의 공공성 강화라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경제가 위기에 처해도 정부 여당의 독선과 오만은 그칠 줄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책 질의 이끄는 ‘多選같은 初選’

국감 인물

국토해양위 이용섭 의원



특히, 광주·전남 지역 최대 현안인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문제와 관련, 이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국토부의 의지 부족을 질타하는 ‘양동전략’을 구사, 장관으로부터 ‘연내에 호남고속철도 조기개통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18대 국회에서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이 좀처럼 국정감사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섭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 을)이 전문성과 풍부한 관록을 바탕으로 분전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국제청장, 청와대 혁신수석, 행정부장관, 건교부장관 등을 역임한 이용섭 의원은 부동산 정책 등과 관련, 날카로운 질의를 쏟아내면서 민주당의 핵심 공격수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의원은 우선 지난 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주택 정책이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 머물고 있다고 강력 비판, 전직 장관이라는 점에서 무난한 질의(?)를 기대했던 국토부 관계자들이 진땀을 흘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2008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2008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2008년 10월 15일 - 17일

주최: 농림수산식품부, 광주시농업기술센터

주최위원장: 김후진 (민주·북구2)

주최위원: 김형오, 김두기, 김성환, 김희철, 김희정, 김희진, 김희영, 김희연, 김희애, 김희진, 김희영, 김희연, 김희애

주최위원: 김형오, 김두기, 김성환, 김희철, 김희정, 김희진, 김희영, 김희연, 김희애

주최위원장: 김후진 (민주·북구2)

주최위원: 김형오, 김두기, 김성환, 김희철, 김희정, 김희진, 김희영, 김희연, 김희애

주최위원: 김형오, 김두기, 김성환, 김희철, 김희정, 김희진, 김희영, 김희연, 김희애